멀어져가는 정치권의 오월 관심 … 물 건너가는 6월국회 통과

전두환추징법 외 '5·18 관련 의안' 어떻게 돼가나

'임을 위한…' 5·18 기념곡 지정 → 18일 정무위 상정

5·18 왜곡 명예훼손 처벌법 → 논의 힘들어진 상황

'박관현법'·반인륜범죄 부인 → 상정 기회조차 못잡아

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5·18 역사왜곡 방지 등을 위해 발의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의안들이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다.

13일 현재까지 전두환 추징법을 제외하고 국회에 발의된 5·18 관련 의안은 결의안 1건과 법안 4개다.

이중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이 지난 3일 제출했던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은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다. 민주당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 또 새누리당 소속인 정무위원장과 간사를 만나 협조를 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협조 서신을 발송하는 등 결의안 채택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 결의안은 법안과 달리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 된다.

이 결의안과 달리 다른 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기 힘든 상황이다.

발의된 4개 법안 중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에 회부된 상태며 나머지 3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됐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 하는 최 의원의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최 의원 측은 전했다.

정무위 소속인 강 의원 측 관계자도 "일단 전문위원 검토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해 당장 상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하지만, 6월 국회 중 상정 기회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사위에 회부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홍종학 의원 5월21일 대표 발의)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5월27일 대표 발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박관현법' 김동철 의원 4월17일 대표 발의) 등도 아직 상정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여야 간사가 의사 일정을 논의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 상정을 합의해야 하지만 다른 법안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마저 '을 지키기'에 집중하면서 '전두환 추징법'을 제외한 다른 5·18 관련 법안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지원을 중단하는 내용)과 같이 5·18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기한 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뿐 아니라 새누리당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5·18 단체와 지역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 지역의 여론을 전달, 법안 처리를 압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두환 재산환수 특위 첫 회의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환수 특위' 첫 회의가 13일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최재성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법률·세무 전문가 '전두환추징금 환수' 참여

민주, 국민협업 세무조사 추진

민주당은 13일 일반 시민 및 법률·세무 전문가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에 참여하는 '국민협업 세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 은닉 방식과 새로운 세금 추징 방식 등에 대해 일반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추징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공 당시 권력층의 권력지도 및 전 전 대통령의 일가 지도도 국민협업을 통해 만들어나갈 수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조만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활용해 국민 협업을 위한 소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대문구에 특위활동과 관련한 사무실을 마련해 오프라인에서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위는 또 이른바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인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벌여 새누리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은 전 전 대통령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선택해야 한다. 방어적으로 나오면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의장단 총리실에 5·18 왜곡 규탄 성명서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14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 왜곡·비방 규탄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의장단은 "최근 인터넷사이트와 일부 종합편성 채널방송에서 벌어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선동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의장단은 또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채택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조기 착공 촉구' 등 4건의 대정부 건의안도 함께 전달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대통령 6억 사회환원 추궁하자 정총리 '버럭'

"5·18 노래 입막은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해야"

국회 대정부질문

여야는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교과서 이념 편향성 및 역사 왜곡 문제 등에 대해 정부를 사이에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전두환 추징금'=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홍원 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 전 대통령 자녀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국회에서 조사를 요구했는데도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이어 "1원이라도 강제 추징되면 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의 의지를 갖고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은 이미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선 후 6개월 동안 아무런 언급이나 실천이 없다"고 비판한 뒤, "6억원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32억9000만원인데, 박 대통령이 현재 재산이 26억원 정도"라며 "전 재산으로도 갚지 못할 빚을 갚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다소 격앙된 어조로 "일방적으로 가치를 환산해 33억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어떻게 답하나. 이런 공세는 적절치 못하다"고 반격했고, 의원석에 있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일개 국회의원이 재판까지 하려 하느냐"고 반발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소동이 이어지자 안 의원은 "왜 평소 총리답지 않게 역정을 내시는가. 총리는 자신과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일방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역사교과서 이념 편향성 논란=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교과서부터 조치해야 한다"며 야당과 진보세력을 공격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가 보수 세력의 역사왜곡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역공을 취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최근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를 놓고 '극우 교과서'라는 루머가 유포되고, 전교조는 불매운동을 벌일 태세"라며 "여기에 야당까지 나서서 해당 교과서를 '왜곡 교과서'로 낙인찍으려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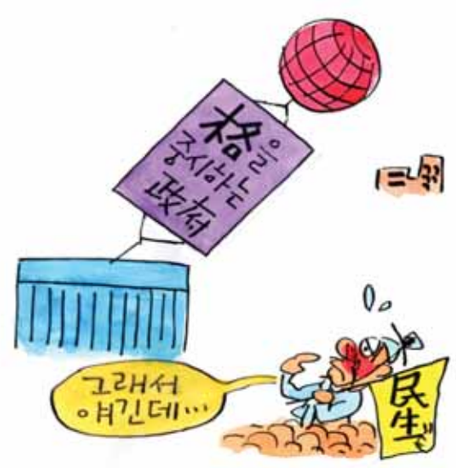
반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대부분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군을 향해 발포한 사실을 게재하지 않고, 고교 교과서들은 12·12 군사쿠데타를 12·12사태로만 표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역사 왜곡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헌법 개정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규정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며, 아울러 종편·일베 등의 역사왜곡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5·18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5·18에 대한 폄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훈처장 해임을 통해 역사왜곡 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낙日만평

- 김종두



품격있게 사는 방법좀…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선릉점(선릉역 2번 출구):02)56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스필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광내 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이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빌):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68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